
「2021-제7호(Vol. 15호)」

예산·재정 정책연구 동향

본 자료는 2021. 8. 4. 까지의 국내외 주요 동향을 요약·수록한 자료로,
'바로가기'를 누르면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 원 도 의 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

분 야 별 목 차		
분 야	제 목	자료 출처
1. 경제 (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7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수정 발표 • 2021년 하반기 거시경제 전망 • 최근 강원지역 수출 현황 및 전망 	기획재정부 산업연구원 한국은행
2. 재정 (2~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확정 • 제8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향 확정, 연 5조원 이상 지방재정 확충 	국회예산정책처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3. 예산·재정 관련법령 (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2021년 세법개정안 발표 	법제처 법제처 기획재정부
4. 정책 및 연구 (5~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탄소감축 입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대외부문 거시건전성 정책 10년의 성과와 개선방안 • 최근 글로벌 기준금리 동향 및 시사점 • 지역경제의 현황과 시사점 • 플라스틱 오염 위기에 대한 정책과 기업의 대응 • 최근 국내 소비자물가의 특징 및 향후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 현대경제연구원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예산정책처
5. 예산·재정관련 뉴스브리핑 (8~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합동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 발표 • 디지털전환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활성화 방안 • 2020년도 지방공기업 결산결과 발표 • 산업현장이 필요로 하는 인재, 직업계고에서 길러낸다 •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현장 조사 성공적 마무리 •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주거플랫폼 사업 본격 추진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통계청 국토교통부

1. 경제

출처

■ 2021.7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수정 발표

기획재정부

- (세계경제전망) '21년 성장률은 6.0%로 유지('22년 4.9%, +0.5%p)되고 있지만, '21.4월 전망시보다 국가 간 불균등 회복이 심화되는 양상임.
- (국가그룹별) 대체로 선진국은 상향, 신흥·개도국은 하향조정되고 (위험요인) 백신 보급 지연, 미국 경기부양책 축소 가능성, 인플레이션 압력에 따른 금융긴축 등의 하방위험이 상존함.
- (정책 권고) 국가간 불균등한 회복 완화 및 세계경제 회복세 지속을 위해 국제 공조 강화 및 적극적인 정책 유지를 권고함.
- (재정전망 및 금융안정) 글로벌 재정수지는 소폭 개선되었고 금융시장 여건은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으며, 국가 간 경기회복 속도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성장 전망을 크게 상향 조정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음. 한편, 세계 경제전망과 함께 수정된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에서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 전망도 크게 개선됨.

[바로가기](#)

■ 2021년 하반기 거시경제 전망

산업연구원

- (국내 경기상황) 2021년 국내경제는 코로나19의 불확실성 지속이 소비 회복세를 제한하고 있지만, 대외여건의 개선에 따른 수출과 투자의 빠른 회복, 2020년 역성장의 기저효과 등으로 4.0% 성장이 예상됨.
- (대외여건 전망) 대내외적으로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백신 보급 속도, 코로나 19 확산세 지속 여부 등)이 가장 큰 변수인 가운데 민간소비의 회복 속도와 고용 시장 안정화 여부, 소득 여건의 개선정도 등이 추가적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바로가기](#)

■ 최근 강원지역 수출 현황 및 전망

한국은행

- (개황) 강원지역 수출은 2000년대에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다가 2020년 들어 코로나19 확산으로 주춤하였으나 하반기부터 회복으로 전환됨.
 - * 전국 수출 대비 비중은 2000년 0.2%에서 2020년 0.4%로 확대되었으나, 제주(0.03%)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임.
- (주요 수출품목별 현황) 의료용전자기기, 자동차부품 등 기존 주력품목이 높은 비중을 유지한 가운데, 최근 면류, 의약품, 화장품, 전선 등이 빠르게 증가함.
- (주요 수출대상국별 현황) 중국과 ASEAN5에 대한 수출 비중이 확대되는 가운데, 2000년대 초반 주요 수출국이었던 미국과 일본의 비중은 점차 감소함.
 - * ASEAN5: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 (전망) 전선, 의약품 등을 중심으로 수출 호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이 장기화될 경우 자동차부품 수출 회복세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바로가기](#)

2. 재정

출처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 (추경안의 구성) 2021년 7월 2일 제출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1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총지출 기준 13개 부처 7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됨.
- (추경안의 편성배경) 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국민 지원 ② 코로나19 방역 안정화를 위해 백신 확보·접종, 방역대응, 의료기관 손실보상 및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 등 선제적 지원 ③ 일자리, 취약계층 지원임.
- (재정 총량) 추경 규모는 총 35.0조원으로서, 33조원은 총예산 및 기금지출계획 증액에 지출되고 2.0조원은 국채상환에 활용 예정임.
- * 2008년 이후 14차례 추경안 중 2번째로 큰 규모임(세출증액 규모로는 가장 큰 규모)
< 1차~5차 코로나19 대응 재난지원 프로그램 규모 >

구분	코로나19 대응 재난지원 프로그램				
	1차	2차	3차	4차	5차
규모 (조원)	12.2	7.8	9.3	14.9	33.0
예산	2020.2회추경	2020.4회추경	2021.본예산 및 2020.집행잔액	2021.1회추경	2021.2회추경

- (편성목적별 주요내용) ①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 13.4조원(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등), ② 백신·방역 4.4조원, ③ 고용·민생 2.6조원, ④ 지역경제 활성화 12.6조원임.
- * 주요 사업별 분석은 전문 참조

[바로가기](#)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확정

기획재정부

- (규모) 피해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정부안 33조원 대비 +1.9조원 확대한 34.9조원으로 확정(2.6조원 증액, 0.7조원 감액)함.
- (주요 증감내역) ①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 확대(+1.4조원) ②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 확대(+0.5조원) ③ 코로나19 방역 긴급 대응(+0.5조원) ④ 취약계층 등 민생지원(+0.2조원) ⑤ 감액 등 재원 조치(-2.6조원)임.
- (결과) 국회통과 후 총지출 증가율은 전년대비 +18.1% 증가(1차 추경 대비 +6.3%p)하고 재정수지 GDP 대비 △4.4%, 국가채무 47.2%(정부안과 동일)로 최종 총량이 변화함.
- (향후 계획) 추경 사업이 적시에 집행되어 코로나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경TF 및 주요사업별 TF 등을 통해 집행 준비에 총력을 다할 예정임.

[바로가기](#)

2. 재정

출처

■ 제8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9일 「제8차 재정관리점검회의」 회의에서 본예산 및 1차 추경의 상반기 재정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21년 2차 추경(7.24. 국회 통과) 집행 계획을 논의함.
- 모든 부처와 지자체가 적극 협력하여 본예산 및 1차 추경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한 결과, 본예산의 경우 중앙재정은 역대 최고 수준인 68.2% 집행, 지방·지방교육재정은 64.3%와 75.6%를 집행하여 계획을 초과달성하고, 1차 추경은 관리대상(11.3조원)의 82.9%인 9.3조원을 집행(7.21일 기준)함.
- 이러한 적극적 집행에 힘입어 정부의 성장기여도가 지난 1분기 0.4%p에 이어 2분기 0.3%p로 (+)를 유지하는 등 재정이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다고 평가함.
- 한편, 2차 추경(80개 사업, 34.9조원)의 71개 사업, 20.9조원을 집행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중점 관리하기로 함.

[바로가기](#)

■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향 확정, 연 5조원 이상 지방재정 확충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는 7.28.(수) 국회 재정분권특별위원회 당·정·청 전체회의에서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향'이 확정됨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광역과 기초 간 자원배분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하였음.
 - * 8월초 '지방재정전략회의' 통해 구체적 방안 발표 예정
-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향의 확정으로 향후 지방소비세 4.3%p 인상,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 신설, 기초자치단체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 핀셋지원 0.2조원 등 매년 총 5조원 이상이 지방재정에 확충될 것으로 예상됨.

<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향 요약 >

(단위: 조원)

지방재정 부담	(3.1)	지방재정 확충(①+②+③)	
		지방세 확충(①)	+5.3
			+4.1
① 지역밀착형 국고보조사업 지방 이양	(2.3)	①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4.3%p ↑)	+4.1
		② 지역소멸대응기금 도입	+1.0
② 지방교부세 자연 감소	(0.8)	③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 핀셋지원	+0.2

⇒ 순확충 총 2.2조(5.3-3.1) 규모

-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내주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될 예정임.
 - *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및 지역소멸대응기금 신설을 위한 「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등

[바로가기](#)

3. 재정·예산 관련 법령

출처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21.7.27. 제정 / '22.4.28. 시행)

법제처

- 최근 도시 환경이 변하여 중·상류층이 도심의 낙후지역으로 유입되면서 그 지역의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이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기존에 거주하던 원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이 지역상권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상권 젠트리피케이션은 특색 있는 상권 형성에 공헌한 기존 상인, 수공업자, 예술인들이 임대료 급상승으로 기존 삶의 터전을 잃게 되고, 획일화된 대기업 매장과 대규모 프랜차이즈 업체의 입점으로 기존 상권 고유의 특색이 사라지게 됨으로써 오히려 상권이 축소되어 임대인, 임차인, 사업자 등 지역공동체 당사자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함.
- 한편 그간 도시 개발,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많은 구도심 상권이 쇠퇴하고 그곳에서 생업을 이어오던 소상공인은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으며, 상권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하고 쇠퇴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임대인, 임차인, 사업자 등 지역공동체 당사자 간의 공존과 상생의 협력적 이해관계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이에 동 법안은 지역공동체 당사자 간의 공존과 상생의 협력적 이해관계를 증진시키고, 지역상권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예방하며, 또한 쇠퇴해가는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에 특화된 문화의 지속적인 발전 및 지역 서민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바로가기](#)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21.7.27. 제정 / '22.1.28. 시행)

법제처

- 최근 대기업 이전,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지역중소기업의 애로가 가중되고 있으나, 지역 혁신의 기회요인 역시 증대되고 있음. 특히 지역단위 위기에 대한 상시 대응과 지역 주도 뉴딜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역산업과 지역경제 발전의 핵심인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과 혁신 촉진이 필요하나, 과거 지역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분리·폐지된 이후 이에 대한 별도의 법률체계 등이 부재한 상황임.
- 이에 현행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지역중소기업 지원 조문을 이관하고,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원체계를 정비함과 함께,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 설치, 지역 혁신기관과 연계한 지역중소기업 지원, 지역 혁신 선도기업 육성,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 모니터링 및 대응 등의 내용을 담은 별도의 법률 마련을 통해 지역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역자원과 연계한 혁신을 촉진하고,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산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국가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바로가기](#)

■ 2021년 세법개정안 발표

기획재정부

- 2021년 세법개정 기본방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여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및 일자리·투자·소비 적극 지원 ▲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를 위해 서민·중소기업 및 취약계층 세제지원을 강화, 과세형평 제고 노력 지속 ▲과세기반을 정비하고 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세제도 합리화 노력 경주 등임.
- 주요 개정 내용은 ① 선도형 경제 전환 및 경제회복 지원 ② 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 ③ 안정적 세입기반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등임.
- 한편, 올해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1조 5,050억 원이며 개정대상 법률은 내국세와 관세를 합하여 총 16개임.

[바로가기](#)

4. 정책 및 연구

출처

■ EU 탄소감축 입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배경) 2021년 7월 14일 EU 집행위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55% 감축하기 위한 입법안 패키지, 'Fit for 55'를 발표함.
- (주요내용) ① [배출권거래제 신설/강화] 기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적용 대상인 전력, 철강, 화학 등에 해운, 육상운송 및 건축물 분야를 추가하고 항공 분야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단계적으로 축소 ②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탄소누출을 막기 위해 EU 배출권거래제와 연계하여 2026년부터 역내 수입품에 탄소 배출량에 따른 비용 부과 ③ [에너지 관련 지침 개정] 에너지조세지침, 재생에너지지침 및 에너지효율지침 개정을 통해 탄소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④ [탄소흡수원 확대] 토지이용 및 삼림에 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순 온실가스 흡수 목표를 상향 ⑤ [내연기관 규제 및 대체연료 인프라 확충] 2035년부터 내연기관 출시를 금지하며, 친환경 차량 개발, 생산 및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대체연료 인프라 확충 목표 제시 ⑥ [항공 및 해운 연료 지침] 항공 및 해운 부문에서 친환경 연료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관련 지침 신설 ⑦ [사회적으로 공정한 전환] 경제 및 사회의 친환경 전환 과정에서 탈락하는 산업, 노동자, 지역 공동체가 없도록 사회기후기금, 현대화기금 등의 지원 대책 마련 등임.
- (시사점) 한국은 향후 10년간의 탄소감축 목표를 재점검하고 차질 없이 이행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경제적 구조전환에 따르는 갈등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함.

[바로가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대외부문 거시건전성 정책 10년의 성과와 개선방안

- (목적) 본고는 지난 10년간 거시건전성 정책을 돌이켜 본 후 이를 바탕으로 대외부문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거시건전성 정책 결정요인 및 정책효과 분석 결과) 대외부문 거시건전성 정책의 결정요인 분석 결과 대외요인인 VIX 지수와 더불어 민간신용, 외환보유액, 환율체제 등과 같은 대내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대외부문 거시건전성 정책은 환율, 자본유출입, 금리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외환시장 잠재리스크 점검) 글로벌 불균형 확대가 초래하는 잠재적인 시스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① 외은지점에 대한 대외부문 거시건전성 정책(선물환포지션 제도, 외환건전성 부담금제도)의 성과를 재점검하여 당초 외은지점 유치 취지(달러화 조달 창구)가 활성화되도록 유의 ② 시스템적 중요성(systemic importance) 측면에서 주목을 덜 받아온 비은행부문의 외화수요 급증 사태 발생에 선제적 대비 ③ 비은행부문에 대해 대외부문 시스템적 중요성의 크기를 측정하고 은행부문과의 상호연계성 점검 ④ 정책당국 간 정보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위기대응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거시건전성 정책 지배구조를 개선 ⑤ 한·미간 통화스왑 상설화(standing U.S. dollar liquidity swap lines) 추진
- (정책 제언) 우리나라 대외부문 거시건전성 정책은 2010년 이후 10년간 과도한 외화자금 유입을 억제하여 시스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함.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존에 도입된 거시건전성 정책의 순기능은 제한적이었으며, 이에 따라 향후 내국인의 해외투자를 국내로 유입시키는 유인(incentive)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바로가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4. 정책 및 연구

출처

■ 최근 글로벌 기준금리 동향 및 시사점

-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기준금리 추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세계 각국의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현재 글로벌 기준금리는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저금리 상황하의 세계물가 동향) 최근 세계 경기회복세가 강화되면서 현재와 같은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경우인플레이션 압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최근 글로벌 기준금리 동향) 최근 빠른 경제회복과 함께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주요국을 중심으로 기준 금리 인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됨.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실물지표가 안정적인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연내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시사점) 올 하반기로 갈수록 누적 백신 접종률 증가로 글로벌 경기회복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요국의 기준금리 인상 일정이 예정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있음. 향후 글로벌 기준금리 인상이 거시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국내경제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바로가기](#)

■ 지역경제의 현황과 시사점

- (개요) 전국과의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등 경제적 여건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광역시도가 증가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시급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총 17개 광역시도 중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가 전국을 상회하는 곳은 6곳에 불과하며, 전국 수준과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광역시도는 7곳이나 됨. 본고는 지역경제의 현상을 경제력(GRDP 규모), 일자리, 혁신능력, 재정, 인구 등 5개 부문에 걸쳐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지역경제의 현황) ① [특정 지역 경제력 집중 심화] 1990~2019년까지를 살펴보면 경기, 충북, 충남, 제주 등 4곳의 전체 GRDP 비중이 확대된 반면 나머지 13개 광역시도의 비중은 하락함. ② [일자리 규모 격차 확대] 17개 광역시도 중 세종을 제외하면 2006년 대비 2019년 주민등록인구 1,000명당 종사자수 규모가 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곳이 8곳에 이르는 반면 서울, 충북 등은 전국 수준을 대폭 상회함. ③ [열악한 혁신능력] 17개 광역시도의 지역과학기술역량지수 평가 결과를 보면, 자원, 활동, 성과 등 3개 측면에서 서울, 경기 등 일부 광역시도를 제외한 대부분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④ [약해지는 재정 여건] 재정 운영의 자체 충당 능력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는 세종을 제외한 16개 광역시도가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있으며, 전체 세입 중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을 나타내는 재정자주도도 마찬가지로 낮아짐.
- (시사점) 다수의 광역시도가 소득과 경제력 및 일자리와 같은 현재의 경제 여건은 물론 혁신역량과 재정과 같은 현재와 미래의 성장 기반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가운데, 인구 감소 및 유출 현상마저 이어지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함.

[바로가기](#)

국회예산정책처

현대경제연구원

4. 정책 및 연구

출처

■ 플라스틱 오염 위기에 대한 정책과 기업의 대응

국회입법조사처

- (들어가며)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음식배달 및 택배의 증가로 플라스틱을 활용한 식품용 용기·포장재 사용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폐플라스틱 처리 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했고,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폐플라스틱 재활용 정책 도입을 서두르고 있음.
- (정부정책) ①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용 용기·포장재 원료의 재활용은 방법에 따라 화학적 재활용과 물리적 재활용으로 구분되는데, 현재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음. 이 고시에서는 화학적 재활용은 허용하나 물리적 재활용은 식품 접촉면의 안전을 이유로 불허하고 있어, 식약처는 고시를 개정하여 이르면 2022년 1월부터 식품용 용기·포장재 원료의 물리적 재활용을 허용할 계획임. ② (환경부) 「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에 따라 투명 PET병의 분리수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먹는 샘물 및 음료병 용도의 유색 PET병 금지와 ‘박리되지 않는 PET병 라벨 접착제’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접착제도 물에 쉽게 녹는 성분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향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폐기물의 재활용기준을 개정하여 물리적재활용을 거친 재생원료(r-PET) 사용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임.
- (국제동향) 2015년 이후 유럽연합(EU)은 제품, 소재, 자원의 가치가 최대한 유지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정책으로 순환경제 정책을 정의하고, ‘자원채취(take)-대량생산(make)-폐기(dispose)’ 중심의 선형경제의 대안으로 재활용, 제품 수리 및 업사이클링 등을 통해 자원 사용을 줄인 순환경제 체제를 구축하려고 노력 중임. 특히 기후변화의 주원인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20년 ‘탄소중립 2050’을 선언한 후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자원을 재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빠르게 전환하는 등 순환 자원화 정책 추진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음.
- (제도도입 시 고려사항 및 활성화방안) ① 식약처와 환경부는 r-PET을 안전하게 생산하고, 식품업계가 이를 용기·포장재로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관리체계를 고도화 ② 공동주택에서 투명 PET 배출 시 포장재 뚜껑 등과 같은 다른 재질이 포함되어 배출되지 않도록 분리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 ③ 생원료의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1회용 포장재 제조 시 r-PET의 함유율을 정하도록 하고, 점차적으로 함유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④ r-PET이 음료포장재로 다시 성형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기준 규격과 안전성 검증방안을 마련하고, 국내외 재활용 관리 현황 및 기술 연구를 근거로 한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EU, 미국, 일본과 같이 인위적 오염 시험에 대한 객관성 확보 등임.

[바로가기](#)

■ 최근 국내 소비자물가의 특징 및 향후 전망

국회예산정책처

- 최근 국내물가는 에너지와 식료품 등 공급측면의 물가 오름세와 함께 관리물가가 하락하는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음.
 - * 2021년 들어 소비자물가는 상승세를 지속하며 4~6월 중 물가상승목표인 2%를 상회
- 소비자물가의 변동요인을 총수요압력, 원자재가격, 환율 등으로 구성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이들 변수들에 유의미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본 소비자물가 실증분석 모형을 이용할 경우, 올 하반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통화당국의 물가안정목표(2.0%) 수준에 근접하는 수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바로가기](#)

5. 뉴스브리핑

출처

■ 정부 합동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 발표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추진 1주년을 맞이하여 대통령 주재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개최하여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고 밝힘.
- 한국판 뉴딜 2.0에서는 ‘안전망 강화’를 ‘휴먼 뉴딜’로 대폭 확대·개편하여 사람투자 강화, 불평등·격차 해소 등을 추진하며, 또한, 디지털전환·탄소중립 등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고 체감성고를 확산할 수 있도록 분야별 신규과제를 추가 발굴하고 기존과제를 확대·개편할 예정임.
- 재정투입에 있어서도 ‘25년까지의 누적 총사업비 규모를 기존 뉴딜 160조원에서 220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며, 한국판 뉴딜 2.0을 통해 우리 사회는 ① 더 편리하고 안전한 일상을 체감할 수 있게 되고, ② 탄소중립 실현을 통해 글로벌 그린 강국으로 도약하며, ③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여 건강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바로가기](#)

■ 디지털전환·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활성화 방안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는 7.22.(목)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전환·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힘.
-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디지털전환·탄소중립” 등 환경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기업의 변화 필요성 증대되고, 이미 금융·산업 측면에서 기업들의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추진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게 하는 변화의 움직임이 시작됨.
- 또한, 디지털전환·탄소중립으로 대변되는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 대응 없이는 시장에서 경쟁력 약화 우려됨에 따라 기업들의 선제적 사업구조개편을 제한적으로 지원해 온 현 제도 현황 점검 후 「새로운 제도적 기반」 구축이 필요해짐.
- 이번 방안은 당면한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작동 가능한 「통합적·체계적 수요발굴-효율적 제도운용-시장기능 강화」 정책 프레임워크 구축·운용을 기본 방향으로 하며, 주요 내용은 ① 전략적 수요발굴·관리 체계 구축 ②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제도 실효성 강화 ③ 시장 친화적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촉진 ④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인프라 확충 등임.

[바로가기](#)

■ 2020년도 지방공기업 결산결과 발표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는 407개 지방공기업(상·하수도 등 직영기업 254, 지방공사 68, 공단 85)에 대한 2020년 결산 결과를 7.29.(목) 발표함.
- 2020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자산은 210조원, 부채 54.4조원(부채비율 34.9%), 자본 156조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볼 때 자산은 5.1조원, 부채는 1.9조원, 자본은 3.2조원이 증가하였고, 부채비율은 0.5%p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직영기업) 직영기업 전체 부채는 7.0조원, 당기순손실은 13,928억원이며, 직영기업 중 상·하수도 부채는 각각 0.6조원, 5.1조원임.
- (도시철도공사) 부채는 8.3조 원으로 전년 대비 30.7% 증가했으며, 낮은 요금현실화율, 무임승차손실 지속 등 구조적 요인과 코로나19 영향 승객감소로 인하여 당기순손실이 18,235억원으로 경영적자가 계속되고 있음.
- (도시개발공사) 부채는 36.6조 원으로 전년 대비 2.7%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9,16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18억 원 증가하였음.

[바로가기](#)

5. 뉴스브리핑

출처

■ 산업현장이 필요로 하는 인재, 직업계고에서 길러낸다

교육부

- 교육부는 8.2.(월) 2021년 직업계고등학교 학과 재구조화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101개교 148개 학과의 재구조화를 지원한다고 밝힘.
- 기술혁신 가속화와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역량과 학생·학부모의 교육 수요도 달라지고 있어 이에 적극 대응하고 직업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16년부터 직업계고의 학과 개편과 교육과정 고도화를 지원하고 있음.
- 올해는 148개 학과 중 기계 분야(32개), 전기·전자 분야(25개)로의 개편이 가장 많이 선정되었고, 디자인·문화·콘텐츠 분야(17개), 농림·수산·해양 분야(14개)가 뒤를 이었으며, 선정된 학교는 시도교육청의 학과개편 승인 절차를 거쳐 2023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게 되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과개편에 필요한 교육과정 준비·운영, 교원 확보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과 상담을 지원할 계획임.

[바로가기](#)

■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현장 조사 성공적 마무리

통계청

- 통계청은 지난 6.14.(월)부터 7.30.(금)까지 약 한달 반 동안 전국의 사업체 약 330만 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현장 조사가 마무리 되었다고 8.1.(일) 밝힘.
- 경제총조사는 우리나라 전체 경제활동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5년마다 시행되는 조사로, 2011년에 처음 조사가 실시된 이후 올해로 3회째임.
- 이번 조사는 통계청이 2017년부터 구축한 기업통계등록부(SBR)를 처음으로 활용하여 별도의 사업장 없이 영업하는 전자상거래 사업체와 같이 물리적 장소가 없는 사업체도 통계 작성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했음.
- 통계청은 현장 조사된 내용에 대한 검토를 거쳐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에 대한 잠정 결과를 올해 12월에 공표하고, 전체 결과는 내년 6월에 확정 공표할 계획임.
- 경제총조사 결과는 국민소득(GDP), 지역소득(GRDP) 등 소득통계 추계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통계청에서 매달 조사하는 광업·제조업 동향조사, 서비스업 동향조사 등 시의성 높고 활용도가 높은 월간 조사 통계의 모집단으로도 활용됨.

[바로가기](#)

■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주거플랫폼 사업 본격 추진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는 8.2.(월)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한 지방 낙후지역의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21년 지역개발 공모사업 12개를 선정하여 주거플랫폼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힘.
- 주거플랫폼은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과 지역에 필요한 생활SOC, 그리고 일자리를 함께 공급하여 지방 중소도시 및 농산어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균형발전 사업이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서류 심사, 현장 점검 및 최종 발표평가를 거쳐 지역수요맞춤지원 11개, 투자선도지구 1개 등 총 12개의 지역개발 공모사업을 선정하였음.
- 지역개발 공모사업은 성장촉진지역(70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 생활편의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해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투자선도지구와 지역수요맞춤지원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선정하고 있음.
- 이번에 선정된 주거플랫폼 사업의 주요내용은 ① (투자선도지구) 경남 함양 e-커머스 물류단지 ② (지역수요맞춤지원) 작은학교 살리기와 연계한 주거플랫폼 ③ (지역수요맞춤지원) 청년 창업과 연계한 주거플랫폼 ④ 지역수요맞춤지원과 같음.

[바로가기](#)